

가금산업 발전대책(초안)

- 가금류 사육단계별 문제점 및 건의사항(육계부문)

농림수산식품부

1. 부화단계

1) 종계·부화업 신고제 도입에 따른 문제해결

- 1999. 7월 정부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되어 있던 종계·부화업이 신고제로 전환
- 이에 따라 종계장 개소수가 대폭 증가
 - (등록제) : 230여개소 → (신고제) : 509개소
 - 신고제 전환으로 인한 허술한 종계관리로 각종 양계질병이 만연

➡ 건의사항

- 종계·부화업 허가제 전환
 - 종계·부화업 허가 조건에 사육감축이행 명시
 - 허가 종계장 정기적인 의무교육 실시
- 종계장 방역체계 구축
 - 전 종계장 대상 방역체제 구축
 - 무허가 농가(질병유발 가능성 농가) 완전 퇴치방안 강구
 - 각 농가에 대한 소독 실시 명령 강화
- 종계 사육수수 및 실용계 생산수수 파악
 - 원종계 농장의 종계분양실적 및 각 종계장의 실용계 생산수수 보고 의무화

○ 종계 일반검정 실시

- 종계 입식일로부터 유효기간(도태시기) 법적 명시
- 유효기간 이후 사육 엄격 통제(강제환우 금지)

○ 종계장 시설개선

- 종계업 허가시 일정시설(완전계사) 구비를 위한 지원 확대
- 종계장 시설기준 강화

2) 종계(원종계) 사육수수 쿼터제 도입

- 양계업 경기의 불·호황에 따라 종계 사육수수 증감폭이 크게 나타남.
- 육용 원종계 사육수수는 적정수 기준(12만수) 약 50%(5만수)대 이상 초과(현 17만수)
 - 종계의 사육수수 증가는 양계업 불황으로 이어지며,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후에는 종계 사육수수 증가로 반드시 불황초래
 - 계란 및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인한 양계산물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의 종계입식으로 불황 장기화 초래

➡ 건의사항

- 적정 사육수수 산정 후 폐업 희망농가 및

- 감축물량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
- 사육수수 쿼터 배정량의 신규 또는 사육 수수를 증량농가 분담금 납부제 도입
- 학계·업계·정부·협회로 구성된 쿼터제 심의기구를 통해 업체별 쿼터량 배분
 - 세대별(GPS-PS-CC) 적정 사육수를 국내외 동향 등을 근거로 배분

3) 종계장 인근 방역위험시설 설치금지

- 현행 축사설립 기준에 농장간 거리제한 규정이 없음.
- 이에 따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자체 농장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인근 농장발생으로 살처분해야 하는 경우 발생
 - 종계(원종계) 농장이 청정화 지역에 있지 않을 경우 실용계 생산성에도 문제가 발생, 원가 상승요인 대두

● 건의사항

- 종계장 인근 방역위험시설 설치금지 법제화
 - 거리기준 : 원종계농장은 반경 3km이상, 종계농장은 반경 1km 이상
 - 방역위험시설 : 실용계 사육농장, 오리 사육농장, 집단 개(犬) 사육농장, 기타 조류 100수 이상 사육농장

4) 종계·종오리 체계적인 관리

- 현재 종축사육이 등록제로 되어 있으나 무허가 및 무등록 종계·종오리 사육이 성행

- 무등록 종계장이 30%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
- 종계 등 적정기간 사육 후 도태될 물량이 도태되지 않고 강제환우를 거쳐 종계로 재사용
- 산란실용계를 백세미 생산을 위해 종계로 활용
- 가금수급위원회 자금으로 종계·종오리 D/B 사업을 추진

- 가금수급위 자금 고갈에 따른 계속적인 종계·종오리 D/B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

- 이에 따라 전국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사육수수 등 수급예측이 어려운 여건

● 건의사항

- 종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
 - 종란 및 병아리 거래시 혈통(계통)보증서 발급 의무화
 - 종계장·부화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불량종축 유통 방지 및 미등록 불법 영업행위 단속
- 종계·종오리 거래(분양·도태) 신고제 도입
 - 대상 : 종계 및 종오리, 산란계(백세미 등 알 생산 이용을 감안 종계에 준하여 취급)
 - 신고기관 : 행정계통(시·군) 또는 대한양계협회
- 종계·종오리 D/B 사업 활성화



- 종계·종오리 D/B 사업비 지속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
- 부화장, 백신미농가까지 확대 적용

- 종자오리 간염백신을 통해 면역력 확보
- 종자오리 사육농장은 반드시 간염백신을 접종하도록 법적 제도화

5) 종계(종오리)장 및 부화장에 대한 HACCP 도입

- 종계(종오리) 및 부화장에 대한 HACCP 기준이 없음.
- 이에 따라 사육환경이 열악하여 질병에 약한 병아리 생산이 증가하여 생산성 하락으로 농가 피해발생

➡ 건의사항

- 종계(종오리)장 및 부화장 HACCP 기준 마련

6) 종계(종오리)장 시설 열악 등에 따른 잦은 질병발생

- 종자오리 사육농장 상당수가 파이프 하우스형 축사에서 종자오리를 사육
- 열악한 환경에서 오리를 사육, 질병감염에 따른 농장피해와 AI 등 질병 감염으로 가금산업의 생존을 위협

- 추백리 진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, 부족
- 종계에 접종할 수 없는 티프스 백신을 접종

➡ 건의사항

- 종계·종오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금 지원
- 추백리 진단액 지원금 현실화
- 티프스백신 종계 사육농가 제재방안 강구

2. 사육단계

1) 신종 질병에 대한 조사 및 대책

- CAV, APV 등 신종 질병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 수립이 늦음.
-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만들지 않아 백신 수입이 지연됨.

➡ 건의사항

- 신종 질병에 대한 현황 조사와 신속한 대책 수립
- 신속한 백신 수입 등 신속한 대처와 방지 대책 홍보

2) HACCP 심사기준 개정

- 현재 백색 육용계는 닭 품종별 육질 차이가 없음.
- 그럼에도 닭 품종 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모순
- 이에 따라 특정 사업체를 지원하는 모양이 될 수 있음.

➡ 건의사항

- HACCP 심사기준 개정
- 평가항목에서 닭 품종 항목을 삭제하거나, 백색육용계, 백세미, 토종닭, 오골계 등으로 크게 분류

3) 육계 계열화사업 개선

- 현재 육계 계열화사업 비율은 전체 육계 산업의 약 85% 수준
 - 투기적 사육이던 육계산업이 계열화사업 추진으로 인해 안정적 육계사육으로 발전
- 육계산업은 발전했으나 계열화업체와 사육농가간 갈등 대두
 - 불공정한 계약사육 방식에 대한 농가의 불만고조
 - 사료, 병아리 등 생산관련 주재료의 품질저하로 인한 농가피해사례 발생
 - 계열농가에 지원할 정부자금을 계열업체를 통해 지원
- 계열화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육계 사육농가의 정책지원 혜택 감소

㉠ 건의사항

- 계열화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여 구조조정 시행
- 정부지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, 감독 등을 통한 계열화사업의 근본취지 확립
-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간 공존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평계열화 도입
 - 농가대표들로 구성된 협의기구 설치
- 품질개발비 지원 및 생산된 제품의 수출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지원(일반 육계사육농가)
 - 특성화로 인한 육계 사육환경 개선으로 평당 사육수수 감축에 따른 농가손실분을 정부에서 지원(친환경직불제 연계)

- 시·군 단위별 소규모 도계장 및 가공 시설 지원

- 계열화업체 소속 사육농가에 정부 정책 자금 직접 지원

4) 계열농가 안정성 확보

- 계열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부실이 예상됨에도 계열농가는 사육비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육계를 출하
 - 그러나 소속 계열업체가 도산할 경우 대부분의 농가는 육계사육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

㉠ 건의사항

- 계열회사의 도산 등 문제점 발생시 농가의 사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 마련
 - 제3의 경영자가 인수할 경우에도 동일방안이 적용되도록 법적 장치 마련(농가의 사육비를 인건비 차원으로 분류)

5) 계열농가 사육기반 확충

- 병아리 및 사료품질과 관련된 검정절차가 없어 문제점 발생시 농가가 상당부분 피해 감수
 - 원자재(유류대, 사료비 등) 인상분의 상당부분을 농가에 전가

㉠ 건의사항

- 병아리 및 사료의 품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
 - 원자재 품질저하시 생산성 저하 현상 등 농가 피해발생

- 생산비 인상에 대비한 계열화업체 차원의 적절한 대책 마련

6) 계분자원화사업 지원

- 양계사육농가는 환경문제 발생 등으로 계분처리에 어려움 발생
 - 유류소비량이 가장 많은 양계농가에 계분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성 대두

㉠ 건의사항

- 계분연료화시설 개발비 및 설치비 지원
 - 계분을 건조, 압축성형하여 유류 대체 연료로 사용
 - 일본의 경우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
- 계분자원화사업 지원 확대
 - 농장자체 계분발효 설비 확충시 정부 지원금을 현행 최대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확대
 - 계분발효 건조시설비 5만수 규모농장 기준 3억원 소요

7)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지원액 확대

-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바이오원료 수요증가, 기상이변 등으로 국제 곡물가 가파른 상승
 - 이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양계농가 경영비 가중
- 농가당 양계사육수수 규모화로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2007년 전체 농가

의 3.5% 증가

- 그런데도 양계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수당 650원, 농가당 5천만원 규모로 제한

㉠ 건의사항

- 양계 및 오리농가당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

8) 감보로(IRD) 백신 지원

- 전염성F낭병은 닭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음.
 - 감보로 백신을 할 경우 AI 등 질병감염을 효과적으로 감축 가능
-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적인 지원 절실

㉠ 건의사항

-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에서 감보로 백신 자금지원
 - 등록된 농가에 한해 각 지역별 양계협회를 통해 지급

9) 시설 및 생산자금 지원

- FTA 등 개방화시대에 직면했음에도 생산시설 등의 낙후로 국제 경쟁력 약화
-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생산자금 지원 필요

㉠ 건의사항

- 자동화계사 시설설비 및 환경개선제, 왕겨·톱밥사용 비용 전액 국고지원
- 가축전염병 퇴치 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

- 사료원가 인상에 대한 차액 국고지원
-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면세유 차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

10) 질병 및 방역보상 지원체계 강화

- 농가의 영세성으로 효과적인 질병방역 차원의 시설확충이 어려운 상황
- ➔ **건의사항**
- AI 등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현실화
- 정부의 방역체계 강화 및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방역장비 및 소독시설 지원
-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수급조절 차원의 정부수매시 생산비 기준으로 수매

3. 유통단계

1)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

- 한·미 FTA 타결 등 수입산과의 경쟁 및 차별화를 위해 품질 향상은 당면과제로 부각
 - 포장유통 정착 등 수입산과 차별화를 통한 국내 산업 안정적 발전 필요
-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
- ➔ **건의사항**
- 포장유통 의무화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포장비 지원
 - HACCP 등 위생시설 보유업체 우선 실시 후 타 업체 참여 유도

- 포장유통에 따른 도체 냉각 및 포장설비 설치 지원

2) 닭·오리고기 브랜드육 유통활성화 및 등급제 지원

- 농협 및 일반 계열화업체로 대표되는 닭고기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브랜드 유통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
 - 브랜드 인증지원 사업이 쇠고기, 돼지고기에 편중

➔ **건의사항**

- 육계 브랜드 인증업체(현 5개소)를 확대하고, 정책지원 강화
 - 브랜드전시회 등 홍보활성화로 브랜드 파워를 갖추도록 지원
- 「축산물브랜드육성정책」에 의거 추진하는 「산지 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」 대상에 닭·오리고기 업체를 포함하여 육계에 계열화업체 중심의 메인브랜드 육성 추진
 - 생산자단체,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한 기능성닭, 재래닭 등의 중소형 특화브랜드 육성 추진
- 닭고기 등급제 참여업체 장려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
- 브랜드 인증대상에 오리고기도 포함하여 육성

3) 가열조리식품 등 부가가치 있는 상품개발

- 가열제품은 AI의 영향이 없어 소비확대

및 지속적 수출추진 가능

☉ 건의사항

- 일본 등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외국인 입맛에 맞는 닭고기 가열조리식품(닭갈비 등) 개발

4. 제도개선

1) 농업종합자금 지원에 대한 종계 지원기준 마련

- 종계사육 농가의 경우 운영자금 등이 많이 소요되나 현재는 육계(닭)로 일괄 적용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종계사육 농가에 필요한 만큼 자금이 지원되지 않음.

☉ 건의사항

- 종계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

2) 질병차단 방역을 위한 제도정비

- 농장 특성상 각종 차량(사료, 계란상인 등)의 출입이 많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질병전파에 노출
- 현재 산란종계에 대한 질병 관리사항은 종계업 신고 추백리에 대한 음성결과만 확인
 - 산란기간 중 종계의 능력저하에 따른 불량병아리 생산은 산란실용계 농가의 피해로 직결되며, 난계대 전염에 의한 전염병 발생 우려

☉ 건의사항

- 사료 및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농가에 출

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 실시

- 산란종계의 질병검사를 일정기간마다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
- 산란종계의 능력 및 질병감염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설기구 운영

3) 정부주도의 인증제도 수정·보완

- HACCP 인증제도, 친환경 인증제도, 무항생제 인증제도, 계란등급제 등 정부주도의 인증제도 중 농가 이행사항이 상당부분 중복

☉ 건의사항

- 정부주도 인증제도의 농가 이행사항이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단일제도 적용방안 마련

4) 허가된 축사에서 가금류 사육 법제화

- 무허가 등 제도권에서 관리되지 않는 농가에서 질병 등 문제점 발생빈도 높음.
 - 각종 통계에서 누락됨에 따라 정책수립 등에 걸림돌로 작용

☉ 건의사항

- 모든 가금류를 허가된(방역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시설) 시설에서 사육토록 법제화
 - 정상적인 사육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축사양성화 기간을 마련(한시적인 불법 무허가축사 구제) 